

평창동계올림픽을  
사수  
하라!

Again 1988,  
국가총동원  
령의 부활

평창동계올림픽 시민모니터링단

# 모니터링 리포트

제2호 2017.10.11 (월간)

[facebook.com/pcolympicmonitoring](https://facebook.com/pcolympicmonitoring)

문의 : 문화연대 02-773-7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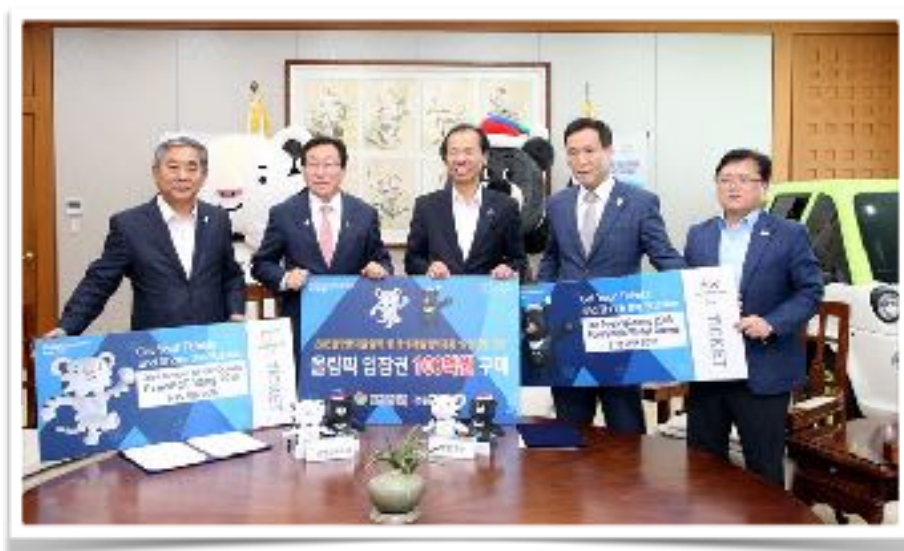
# [특집] AGAIN 1988, 국가 총동원령의 부활

## (1)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 형태 속에 88올림픽레거시 (LEGACY)있다

“올림픽조직위원회와 관련 정부 부처가 올림픽 비인기 종목 입장권 60만 장을 일선 지역 학교에 강매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나아가 일부 중학교에서는 대회 관람을 안 하면 결석 처리하겠다고 밝혀 지적을 받고 있다”

위 내용은 신문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2018평창올림픽 개최를 넉 달 앞에 둔 2017년 현재 상황이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내용이다. 이는 1988년 7월 14일자 동아일보에 “비인기 종목 입장권 학생들에 강매 말썽”이란 제목으로 당시 정부가 서울 지역 학교에 60만 장 가량의 입장권을 배정한 문제를 지적한 기사 내용이다.

근데 최근 이에 버금가는 일이 생겼다. 강원도 교육청이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100억 원 어치를 구입하겠다는 실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해버렸다. 이번에는 강매가 아니라 자매(자청구매 또는 자발적 구매)다. 그러니까 지난 9월 29일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도청을 방문하여 최문순 지사와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100억원 구매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입장권 구입을 위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받을 예정이고, 이를 가지고 도내 학생과 학부모 10만 명에게 입장권을 배부할 방침이다.



지난 9월 29일 강원도청에서 진행한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입장권 100억원 구매 업무 협약식 사진. 최문순 도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출처 : 강원도민일보(2017.9.30) "도교육청 평창올림픽 입장권 협약"

강원도청과 교육청은 입장권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 출석 문제 때문에 경기 관람을 못하는 상황도 염두했다. 지난 9월 24일 해당 기관은 올림픽기간 동안 자원봉사와 서포터즈로 참가하는 1,316명 학생들의 수업 일수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나아가 강원도청은 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국가행사인 올림픽을 교육적 차원으로 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각종 행사 참여와 출석 인정은 학교장의 허가 사항이지만 학생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기회인만큼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역시 입장권 23만장을 구입하여 올림픽 기간 교육부 진로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일련의 상황은 모두 9월 마지막 주에 숨 가쁘게 진행됐다. 교육기관 말고도 시도체육회 서울 25개 자치구, 일반 기업까지 같은 시기에 대동단결하여 입장권 구입을 단행했다. 아울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이 평창 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해 임직원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를 공제해주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에도 반영하기로 의결했다. 입장권 구입 및 구매 혜택 현황을 종합해보면 아래 <표.1>과 같이 후원 형식으로 구매될 입장권 매수는 51만장에 달한다.

<표.1> 평창올림픽 입장권 후원형식 구매 목록

일자	해당 주체	내용	입장권 수_반올림 (장당 3만원 책정)
17.9.24	16개 시도 교육청	23만장 구입 예정 (연합뉴스.2017.9.24.)	230,000
17.9.25	은행연합회	가입단체 은행 입장권 11억 상당 구입 결의( (서울경제2017.9.26)	37,000
17.9.27	신한은행	입장권 1억 원 구매 촉진 협약 체결 (국제뉴스.2017.9.27)	3,000
17.9.27	강원도	27,834장 구매 계획 (연합뉴스.2017.9.27)	28,000
17.9.27	12개 시도	92,395장(28억 원 상당) 구입 예정 (연합뉴스2017.9.27)	92,000
17.9.2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입장권 구매 후 직원에게 발부하면 1인당 20만원 한도로 인건비 공제. 사회공헌활동 실적에도 반영 (연합뉴스2017.9.28.)	0
17.9.29	대한체육회	200여 개의 시·도·군 체육회 2만 장 구매 계획 (한국스포츠경제.2017.9.29)	20,000
17.9.29	강원도 교육청	입장권 100억(10만장) 구매 업무 협약식 (강원도민일보.2017.9.30)	100,000
계			510,000
출처 : 17.9.24~9.29일 평창올림픽 입장권 관련 기사 재구성			

관련 기사를 가지고 추산한 값이지만 평창올림픽 조직위에서 목표한 입장권 판매량인 107만장의 47%에 달하는 규모가 단 일주일간 후원 형식으로 단체 구입한 결과라는 것은 분명 큰 문제이다. 이전 단체 구입을 추가하면 목표량 절반은 쉽게 넘기는 수치일 것이다.

이렇게 무리한 구입이 강행된 원인은 입장권 판매 부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권 유권해석에 기인한다. 먼저 입장권 판매 저조를 살펴보자. 9월 20일 노웅래 국회의원은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현황을 공개했다. 입장권 총 판매량이 약 27만 매에 불과하며 이중 17만여 표는 해외에서 판매됐고 국내 판매량은 10만 표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입장권 관련 유권해석은 지난 9월 25일 여러 언론에 보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입장권을 구매하여 선거구민에게 제공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도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구매한 5만 원 이하의 입장권을 공직자 등에게 배부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판매부진 질타가 이어진 상황에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은 열쇠였다. 이로 인해 입장권 판도라 상자 자물쇠가 풀린 셈이다. 올림픽 입장권은 30년 보다 더 화끈하게 무료 배부될 전망이다. 무릇 관주도형 입장권 구입은 88 서울올림픽보다 심각한 실정이다. 서울올림픽 판매용 입장권 수는 396만 7천장이었다. 88올림픽 개최 사흘 전인 88년 9월 14일 입장권은 2백50만5천 3백36장으로 63%가 팔렸다. 올림픽 총 관람객은 290만 명이었다. 가장 낮은 판매율을 나타낸 종목은 카누로 34%만 판매됐다. 비록 평창올림픽처럼 관주도형 서울올림픽 입장권 단체 구매 실패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서울올림픽의 경우 개최식 입장권 구입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 인기종목의 경우 입장권이 압표로 거래된 일화는 유명하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의 경우는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입장권은 쇼트트랙으로 2만5000장을 판매해 목표치의 62%만 팔렸다. 서울올림픽과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입장권 판매율과 관주도 입장권 수거현상은 유치전부터 시민단체와 극히 소수의 전문가들이 그토록 외쳤던 우려와 비판을 고스란히 증명했다.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 입장권과 관련지어 보면 관람스포츠로서 국내 동계스포츠는 정말 비인기 종목이라는 표현조차 수사적으로 들릴 지경이다. 금메달 유력 종목인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그리고 한일전 축구 경기 만큼 인기가 좋았던 김연아 선수의 피겨스케이팅을 제외하고는 관심이 없었다. 최근 문체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도 이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 9월 29일 문체부에서 발표한 제4차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응답자의 7.1%에 그쳤다. 1차 조사 9.2%, 2차 조사 8.9%, 3차 조사 7.9%보다 낮은 수치다. 이런 상황에서도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은 "올림픽 성공은 국민 관심에 달려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뒤편에선 정재계에 입장권 구입을 애걸한다.

정부가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국제 행사에서 평창올림픽 홍보 시 유독 '최첨단 올림픽'을 강조한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최첨단 'ICT올림픽',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구현 올림픽'이 될 것이라고 자랑한다. 허나 이런 테크놀로지 이면에는 내셔널리즘이 구동된다. 국내 행사에서는 국가행사, 국민통합, 국민관심이 늘 따라 붙는다. 심지어 올림픽 슬로건조차 "하나 된 열정"이다. 이러한 미명이 입장권 구입 강요 논리다. 정작 이토록 호명당하는 국민은 국가주의를 '국뽕'으로 조롱한다. 이제는 국가보다 개인을, 승리보다 존중을, 올림픽이 가지는 특별함과 거대함보다 형평성과 일상성을 논한다. 현실도 올림픽의 효과보다 적자와 논란이 더 선명하다. 이제는 올림픽 입장권 판매현황을 수궁하고 받아드려야 한다. 국민을 들먹이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알팍한 수법은 입장권 판매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개최 직전 정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입장권 강매를 벌여 여론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만약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인천시 교육청이 아시안게임 입장권을 교육과 수업의 일환을 명분삼아 100억 원 어치 구입했으면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여느 정부를 막론하고 체육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입장권 관련 사안을 두고 보면 1988년을 능가할 정도니. 요즘 많이 회자되는 올림픽 레거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입장권 판매 형태만으로도 올림픽 레거시 실체가 또렷이 보인다.

# [특집] AGAIN 1988, 국가 총동원령의 부활

## (2) 문화올림픽, 그 허구성에 관하여

지난 7월 27일, 평창동계올림픽 G-200을 맞아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평창 문화올림픽 기자설명회가 있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평창 문화올림픽을 상징하는 엠블럼과 ‘평창 문화를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공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진행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였다. 노태강 문화부 제2차관은 문화올림픽의 취지를 설명하며 “올림픽은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한 나라의 총체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평창 문화올림픽 엠블럼



평창 문화올림픽 기자설명회 (사진출처 : YTN)

문화부가 생각하는 문화올림픽 계획방안은 기존 문화예술 행사와 새롭게 기획된 예술행사/전시회 등을 평창동계올림픽과 결합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평창 문화올림픽’이라는 이름 아래 모아내겠다는 것이다. 그 규모와 양은 문화판 국가총동원력이라고 불릴만큼 엄청나다. 이미 5월부터 안산 거리극축제, 춘천마임축제, 인천펜타포트록페스티벌 등 대표적인 국내 축제를 ‘평창올림픽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축제 14선’으로 선정했고, 강원지역에서는 강릉 재즈프레소 페스티벌, 평창대관령음악제와 같은 대규모 축제가 진행되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공연, 전시, 이벤트, 축제 등을 전국에서 각지에서 열며, 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가 주요한 키워드로 부각되고,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나쁘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이 적절한가를 따져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화융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철저히 문화를 도구적으로 이용한 이전 정부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기시감을 느끼는 것이 지나친 비약은 아닐 것이다.

## 문화올림픽?

그렇다면, 과연 문화올림픽은 무엇일까? 문화부가 제시하는 설명에 따르면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설명만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굳이 ‘문화올림픽’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떠들어댈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올림픽, 아시안게임, 각종 세계선수권대회 등 수많은 메가스포츠이벤트를 진행해오면서 문화행사를 메가스포츠이벤트의 홍보수단으로 꾸준히 이용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평창동계올림픽을 굳이 문화올림픽이라고 부를만한 철학이나 논리가 전혀 없다. 보도자료를 보면 문화올림픽은 기대한 내용보다는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내용들로 설명되고 있다.



1983년에 만들어진 문화올림픽계획 표지

그래서 이전에는 ‘문화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 찾아보았다. 그 결과 놀랍게도 1983년에 ‘문화올림픽계획’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작성된 이 문서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대회기간 전으로 해서 공연, 전시, 국제행사 등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규모 페스티벌 중심의 사업계획과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점, 대회 전이라는 특정기간에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평창 문화올림픽이 보여주는 행보와 너무나도 유사했다.

이 문서에서 보여주는 문화올림픽에 대한 개념도 현대인의 감성에 맞지 않는 ‘대약진’, ‘민족문화사’ 등과 같은 용어를 감안해서 본다면,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세계문화와 인류의 복지’라는 것도 지금의 올림픽 가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집결시켜 해외에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는 목표적인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1983년 문화올림픽계획	2018 평창 문화올림픽
문화올림픽 개념(이념)	민족사적 대약진의 체험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주체적 민족문화사의 형성에 금자탑을 세우며 세계문화와 인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우리 문화민족의 의지와 업적을 세계 속에...	올림픽 기간 전부터 종료 시까지 올림픽 행사의 일부로 전개하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올림픽 가치를 통해 개최국 및 세계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 엔터테인먼트 축제 교육 활동을 통칭
문화올림픽 목표	- 민족문화의 중흥계기 마련(대내적) - 한국 민족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부각(대외적)	- 올림픽은 스포츠뿐 아니라 문화와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한 나라의 총체적인 역량을 보여 주는 것 -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인들과 호흡하고 즐길 수 있는 올림픽

문제는 문화올림픽계획이 만들어진 시기가 30년 이상이나 전인 1983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2018년 현재 문화부가 설명하는 문화올림픽과 개념적으로나 형식적으로도 전혀 나아진 점이 없이 비슷하다는 점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차라리 산업화를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뤄낸 1970~80년대의 시대적 여건을 고려하면, 민족적 자긍심과 대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설득력은 있다.

결국, 문화부가 말하는 문화올림픽은 1980년대에 만들어진 계획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2018년판 문화올림픽에 대한 설명은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일례로 문화행사를 많이 연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올림픽의 가치가 실현되고 확장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보다 먼저 그들이 추구하는 올림픽의 가치라는 것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 환경파괴, 비리와 특혜, 지방재정 약화 등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올림픽은 반생태적, 반환경적, 반인본주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 대한 성찰이나 반성도 하지 않은 채 문화행사를 많이 한다고 올림픽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 평창동계올림픽, 문화적 가치를 지키는 올림픽이 되어야

문화는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가치나 삶을 살아가는 철학으로서 존재할 때 본래의 힘을 발휘한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올림픽은 문화행사를 많이 치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가치나 철학을 올림픽의 준비과정이나 운영과정에서 녹여낼 때 비로소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문화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어야 하며,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 자유, 평등, 평화 등의 원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에 반해 현실에서 작동되고 있는 올림픽은 문화적인 것과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문화예술행사에 평창동계올림픽 엠블럼을 넣는다고 해서 문화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문화를 철저히 도구화 하고 올림픽의 어두운 면을 덮고 희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행사를 이용하는 올림픽은 너무나도 반문화적이다.

이미 올림픽과 같은 메가스포츠이벤트는 토건자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한지 오래되었다. 그 결과 500년이 넘는 원시림은 스키장 건설을 위해 철저히 파괴되었고, 투기와 난개발로 인해 올림픽 경기장 인근 지역 생태계는 파괴되어 버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문화올림픽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뼈를 깎는 자기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대규모 개발보다는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올림픽,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공생하는 길을 찾는 올림픽, 대규모 이벤트보다는 지역의 주민들과 세계인들이 일상적 공간에서 교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올림픽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문화올림픽이다. 이런 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담아내고자 할 때 비로소 ‘문화올림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자격이 있다.

박선영 / 문화연대 [hinggy@hanmail.net](mailto:hinggy@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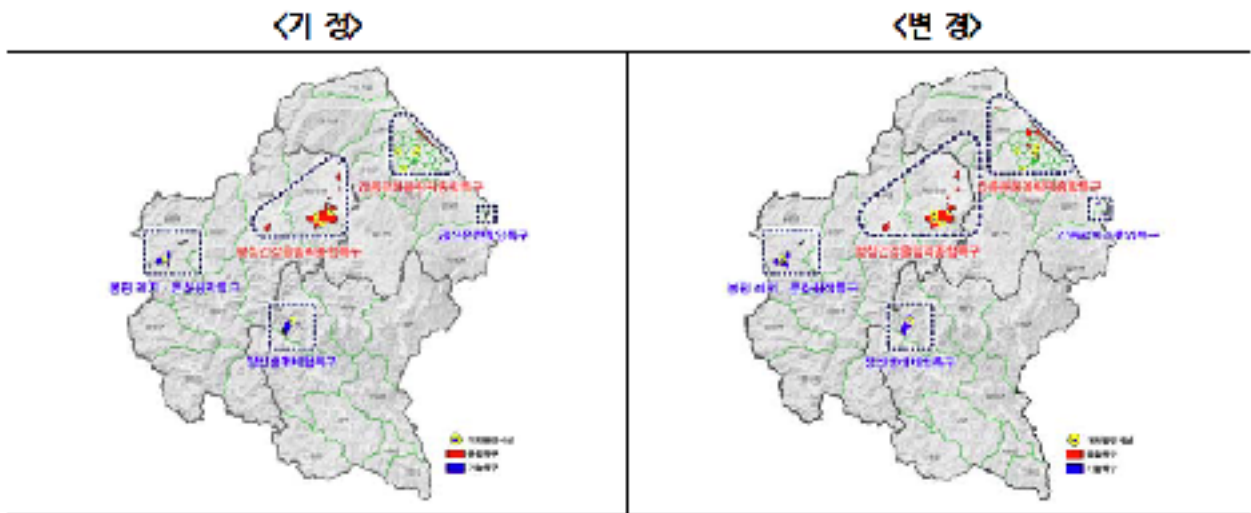
# [특집] AGAIN 1988, 국가 총동원령의 부활

## (3) ‘평창’이라는 프리패스, 책임은 누가 지나: 예산과 법령을 중심으로

전두환 정부는 1981년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을 제정한다. 그 해 12월 14일에 국회에 제출해 15일에 회부되고, 17일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1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 졸속입법이었다. 이 법은 <민법> 상의 재단법인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직접 출연금과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은 물론 국공유재산을 증여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올림픽을 위한 복권 판매를 허용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둔 1986년 4월에는 <올림픽대회등에대비한관광숙박업등의지원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 역시 3월 31일 정부가 제출해 4월 1일 회부되었고 일주일 만인 4월 8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 법은 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광사업 혹은 숙박사업자를 지정관광사업자로 지정해서 온갖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들에게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88서울올림픽의 진짜 본면목은 1983년 부터 적용된 소위 ‘합동재개발’ 사업이다. 기존 <도시개발법>에서 주택정비 사업은 어디까지나 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하는 사업이었다. 하지만 1983년부터 도입된 합동재개발사업은 건설사와 토지주들이 ‘알아서 돈을 버는 방식’으로 주택재정비를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82년까지 재개발 실적이 22개에 불과했는데 합동재개발 방식이 도입된 후 1988년까지는 93개 지구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 사이 서울을 떠난 사람은 72만명이나 되었다. 이런 전면 철거 방식의 사업은 올림픽을 앞두고 도시를 급격하게 변화시킬 방법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올림픽’이다. 올림픽을 유치한다는 사실 만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법을 어기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몰아내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30년 전의 일일까. 문재인 정부는 지난 6월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소위 일자리 예산이다. 그런데 국회심의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애초 추경안에 없던 예산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의 확대다. 당초 안에는 없던 560억원은 대부분이 올림픽 홍보비로 배정되었다. 지난 7월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원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자신에게 할애된 시간을 대부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말하는데 사용한다. 흥미로운 것은 평창올림픽 지원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강릉역 인근 어지러운 전선 모습, 평창 진부국도 도로변 사진, 강릉역 주변 상가 모습, 대관령면 시가지 모습 등을 보여주면서 예산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해라는 점이다. 전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예산 사용이 어떤지에 대한, 즉 예결위원으로서의 재정적 관심보다는 민원 청탁성 읍소에 치중한다. 그리고 어떤 맥락도 없이 4당 간사들의 합의를 근거로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예산 532억원이 등장한다. 적어도 없던 예산을 반영시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공개된 자료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반영되는 평창동계올림픽 예산 450억원 중 홍보비가 230억원, 문화올림픽 사업비가 153억원, 경관개선사업이 36억원 반영되었다. 시간 상으로 보면 1달도 안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을 통해서 500억원에 가까운 신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졸속 예산이다.

사실 이 뿐만 아니다. <평창올림픽법>에 따라 올림픽 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총 39개의 법률 상 심사, 허가 사항이 자동으로 통과되게 만들었는데, 뿐만 아니라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도 법률 상 의제조항을 포함시켰다. 이 특구 사업이 특혜성일 수 밖에 없는데 우선, 올림픽 시설의 경우에는 모두 2017년 말까지 완료되지만 특구 사업은 2032년까지 지속되어 30년간 보장된다는 점 그리고 해당 법률의 혜택이 공공기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재 5개 특구에 12개 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 면적은 3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데, 11개 지구가 강릉시와 평창군에 집중되어 있고 1곳이 정선군에 지정되었다. 이후 2014년 강원도가 수정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17개 지구로 늘어나는데, 평창지역에 2개, 강릉지역에 3개가 늘어났다. 아예 정동진 지구처럼 새롭게 등장한 곳도 있다. 동계올림픽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도 특구라는 이름으로 편승하고 있는 셈이다. 당초 총사업비는 3조 3,062억원인데 이중 국비가 3,640억원, 지방비가 2,828억원이고 전체 80%인 2조 6,594억원이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지정현황> (2014년 종합계획 기준)

하지만 2014년 11월에 변경된 종합계획에서는 오히려 민자의 비중이 크게 늘어 3조 1,92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86%에 달하는 규모다. 이런 재정구조는 올림픽 특구 사업이 사실상 민자사업으로, 해당 특구 사업의 편익이 일반 기업에게 집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올림픽특구 종합계획을 발표한 시점이 2014년 1월이었고, 강원도가 기존보다 사업지와 예산을 증액시킨 계획변경이 이뤄진 시기가 2014년 11월이라는 점이다. 계획 자체도 졸속이고 이후 계획의 변경도 졸속임을 볼 수 있다. 특히 1월 기존 계획 편성에 참여한 국책연구기관은 국토연구원으로, 20년간 지역내 총생산은 10조, 고용유발은 26만명으로 추산했다. 연간으로 보면 총생산은 5,000억원에 달하고 고용은 1만명에 달한다. 과연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이 이런 조사 결과에 향후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도 지켜볼 문제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사업비 변경현황> (2014년 종합계획 기준)

구분	No.	구분	사업명	위치	사업구분	사업기간	사업비액	사업비나용	사업기간(수년)	총투자액 및 내역별 투자계획 (단위: 천만원)	다양한 투자계획(단위: 천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추)			
특구			특구 제1차기 사업						총액	0,000,000	100,000	178,120	402,120	700,000	750,000	860,000	281,000	200,170		
									국비	264,000	11,000	200	7,000	40,000	10,000	10,000	40,000	10,000	10,000	
									지방비	280,000	0	0	10,000	0	0	0	0	0	0	0
									민간	2,456,000	89,000	177,920	401,120	650,000	637,000	407,000	170,000	145,000		
보통			보통 제1차기 사업						총액	285,130	0	0	0	0	0	0	0	0		
									국비	285,130	0	0	0	0	0	0	0	0	0	
									지방비	0	0	0	0	0	0	0	0	0	0	
									민간	0	0	0	0	0	0	0	0	0	0	

현행 <평창올림픽법> 제57조는 특구사업에 따른 다른 법률의 허가 등에 대해 의제가 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률의 주체는 '특구사업시행자'로 총 36개의 법률 상 허가 사항이 나열되어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특구로 지정된 구역 내 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알겠지만 이런 토지 수용권은 용산참사 등을 불러일으킨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다. 국가에 의한 토지 수용은 공익성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올림픽특구사업처럼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수익형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토지수용권을 주는 것은 위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애초 <평창올림픽법>이 제정될 당시에 올림픽특구에 대한 의제 사항이 반영된 맥락이다. 현재 제정된 법률은 2011년에 각각 발의된 권성동 의원안, 윤석용 의원안, 최종원 의원안을 병합한 것인데, 이 중 권성동 의원안에는 특구와 관련된 규정이 있지만 세부적인 법률의 의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최종원 의원안에서는 이것이 있었다. 즉, 당시 여당도 아닌 야당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구체적인 법률상 의제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는 당시 강원도지사가 야당인 최문순 지사였던 것과 관련된다. 적어도 평창동계올림픽의 특구 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와 국회의원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개발의 프리패스가 어떻게 강원도를 할퀴고 지나갈 지 지켜봐야 한다.

김상철 / 나라살림연구소 kimsangchul75@gmail.com

# 평창동계올림픽 뉴스브리핑

## 1. 평창군, 당초 예산의 10% 넘는 추경편성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평창군은 당초 예산보다 472억원을 높여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대부분인 462억원이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여서 평창군의 재정 부담이 급격하게 가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예산 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평창군 재정자립도는 11% 수준으로 동종 단체에 비해서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평창군이 특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4년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하게 낮아 진다는 점이다. 특히 2016년에는 150억원 상당의 지방채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정보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현재까지 지방세입이나 세외수입의 측면에 있어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즉, 평창군은 뚜렷한 수입 전망도 없이 빚을 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평창군, 2회 추경예산 5107억 편성...역대 최대(이뉴스투데이, 2017.9.17.)

<http://www.e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9707>

## 2. 3개 올림픽 시설, 사후 운영 주체 선정 못해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는 강릉에 건설되는 아이스하키장과 스피드스케이팅, 정선에 건설되는 알파인 경기장의 사후 관리주체를 선정하지 못했다. 원래 아이스하키장은 대명에서 맡기로 했으나 백지화되었고 원래 철거하기로 했던 스피드스케이팅장은 존치 결정을 해놓고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특구 사업과 묶어서 민간사업자에게 떠넘기려 하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경기장의 사후관리를 정부에 떠넘기려는 시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애초 계획의 수립과 경기장 운영계획은 스스로 세워놓고 봉니를 부렸던 조직위와 강원도가 사후 비용에 대해서만 공동 책임 운운하는 것은 참 염치없는 짓이다. 개별 경기장은 운영 적자가 20억에서 30억 사이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가 전혀 없었다. 온갖 개발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올림픽 먹튀'가 진행 중이다.

### 3. 선관위 알, '지자체나 교육청이 평창올림픽 입장권 및 관람 지원해도 괜찮아!'

지난 9월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대신 지자체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구매한 5만 원 이하의 입장권을 공직자 등에게 배부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는 올림픽 입장권 국가 총동원령 판도라 상자를 열리게 한 마법의 주문이나 다름없다.

"지자체, 평창올림픽 티켓 주민들에 줘도 선거법 위반 아냐"(연합뉴스.2017.09.2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05700001.HTML>

### 4. 입장권 판매율 25%에 불과, 여론조사서 올림픽 직접 관람 의향은 7.1%에 그쳐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평창올림픽 입장권 총 판매량은 약 27만매로 나타났다. 목표량인 107만매의 25%에 불과한 수치. 이중 절반이 넘는 17만여 표는 해외에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서 국내에 매우 낮은 구매율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일주일 뒤 문체부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 중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겠다는 비율은 7.1%로 1차 조사 9.2%, 2차 조사 8.9%, 3차 조사 7.9%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대부분(81.7%)은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중앙일보(2017.9.21.) "평창올림픽, 입장권 판매부진 심각...심폐 소생 필요해"

<http://news.joins.com/article/21960166>

문화체육관광부(2017.09.29.) "국민 66.6%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

[http://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http://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

[pSeq=1630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http://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6304&pMenuCD=0302000000&pCurrentPage=1&pTypeDept=&pSearchType=01&pSearchWord=)

### 5. 강릉·평창 지역 숙소계약실적 저조, 바가지 요금까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이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동계올림픽 개최 시군 숙박 계약현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말 기준으로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계약실적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 측은 이번 조사내용이 객실 1개라도 계약된 업소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율의 심각성은 더 큰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올림픽이 열리는 강릉 도심지역과 평창 4개면의 평균 숙박 요금은 성수기 평균 요금의 1.5배, 비수기 평균 요금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나서 바가지요금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평창올림픽 숙박 어찌나...계약률 12%, 요금 3배(노컷뉴스, 2017.10.10.)

<http://www.nocutnews.co.kr/news/4857856>